

#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 영국 온라인 세이프티 법

변영건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과정

영국 정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의 디지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세이프티 법안 발의

영국 정부는 2022년 3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 세이프티 법안(The Online Safety Bill)을 발의함. 디지털 이용자 보호의 책임을 테크(Tech) 기업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세이프티 법안은 어린이들을 유해 콘텐츠에서 보호하고 대중이 불법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웹사이트,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온라인 세이프티 법은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만 유해한(Legal but harmful) 콘텐츠까지 걸러내는 적극적 조치임

- 자해, 괴롭힘, 학대, 섭식 장애 등의 주제를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로 정하며 그 기준은 정부 및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양원의 승인을 통해 법률로써 정함
  - 법으로 정한 유해 콘텐츠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
  - 이는 기업이나 경영진의 임의적 판단으로 플랫폼 내에서 합법적 콘텐츠가 삭제되는 상황을 방지
-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 서비스의 경우도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조치해야 함

온라인 세이프티 법은 영국 정부가 작성한 '2019 온라인

인 피해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음. 백서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 초안이 마련됐으며, 2022년 3월 영국 국회에 상정,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법안은 하원 독회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정부 제출 법안은 하원 독회→상원 독회→국왕 동의의 과정을 거침
- 초안 작성 이후 1년간 이뤄진 주요 수정·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사기 근절의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및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스팸 광고 규제
  - 포르노그래피 유통 사이트 이용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제
  - 기업이 유해 불법 콘텐츠와 범죄 활동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조치
  - 사기 계정 단속 조치
  - 음란물 전송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영국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은 규제기관으로서 온라인 세이프티 법을 적용하며, 다양한 관리·처벌 수단을 가짐

- 온라인 세이프티 법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합한 기관인 오프콤을 통해 실행됨
- 온라인 세이프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음

- 오픈컴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 임원진은 징역 2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 회사의 고위 관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오픈컴 인터뷰에 불참,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규제기관을 방해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함
- 본 법은 저위험 기술을 사용하거나 테크 기업이 아닌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한편 온라인 세이프티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

- 오픈컴과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님
- 합법적인 표현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함
- 그동안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자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했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분명히 하고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규칙을 시행해야 함
- 저널리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논쟁은 보호됨. 따라서 뉴스는 본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자신의 포스팅이 플랫폼에서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수많은 어린이들의 행복과 순수함이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힘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이는 영국 DCMS의 장관 Nadine Dorries의 말로, 온라인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기업 등에 책임과 의무가 보다 강력하게 지워져야 함을 강조함

- 온라인 세이프티 법은 소셜미디어가 일상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선구적 조치임
- 법 적용 대상 콘텐츠를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까지 확대하면서 어린이 및 공공의 온라인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함
-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거짓 정보 및 역정보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술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테크 회사들이 성장하는 환경 마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영국 정부 온라인 세이프티 법 소개 자료

(이미지 : GOV.UK)

원문출처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UK (2022.04.19.). [Policy paper] Online Safety Bill: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bill-supporting-documents/online-safety-bill-factsheet#what-the-online-safety-bill-doe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and The Rt Hon Nadine Dorries MP(2022.03.17.). [Press release] World-first online safety laws introduced in Parliament,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first-online-safety-laws-introduced-in-parliament>)

UK Parliament(2022.7.14.). [Parliamentary Bills] Online Safety Bill. (<https://bills.parliament.uk/bills/3137>)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영건(2022).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 영국 온라인 세이프티 법”,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 3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변영건 [younggeon.byun@warwick.ac.uk](mailto:younggeon.byun@warwick.ac.uk)  
발행일: 2022.08.23.

#온라인안전 #디지털안전 #온라인세이프티법 #디지털생태계